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브리핑 nabo Briefing
2018. 11. 1. 제45호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정부는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장사업들을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족, 농업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이 취지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Ⅰ. 개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한부모가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 사회보장사업의 정책환경, 사업 현황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예·결산 심사를 지원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일반 국민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기본욕구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운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저소득 맞춤형 소득지원
-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 저소득층 자립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 고용장려금 지원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및 정착 지원

농업인
- 농지연금,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지원
- 농업정책보험 운영
- 농촌 장학금 및 보육여건 개선 지원
- 농촌주택개량 및 영농 가사서비스 등

예산현황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관련 예산은
2018년 49.6조원에서 2019년(안) 57.1조원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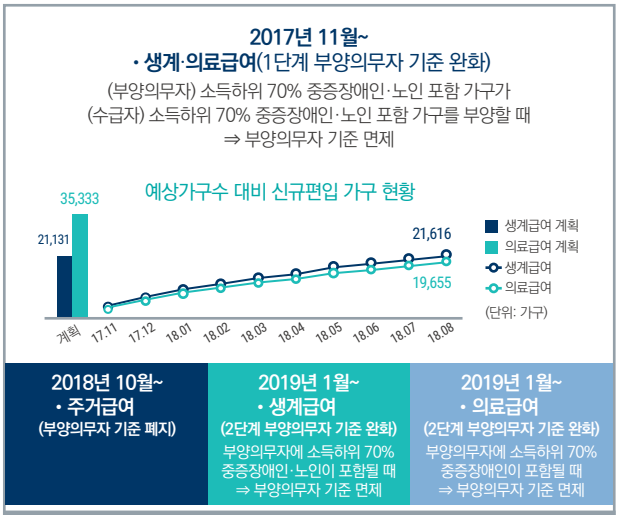
	2018년(추경)	2019년(안)
저소득층	46조 6,647억원	53조 2,769억원
장애인	2조 144억원	2조 6,431억원
다문화·한부모가족	1,592억원	2,865억원
농업인	8,033억원	9,187억원

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Ⅱ. 저소득층

1. 기초생활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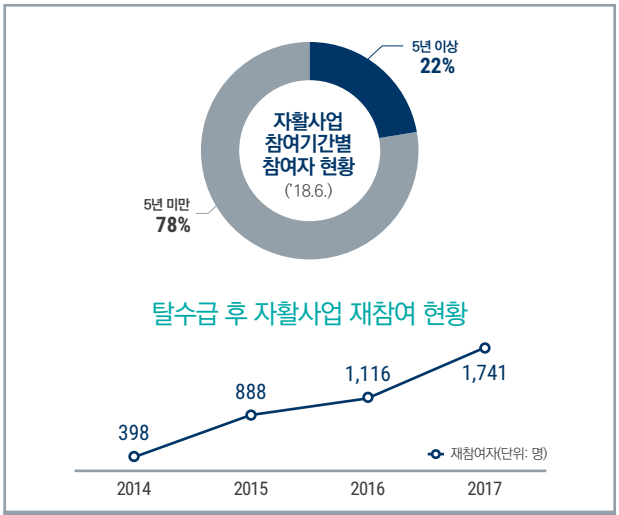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정책효과 발생에 시간 소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사례발굴 등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2. 자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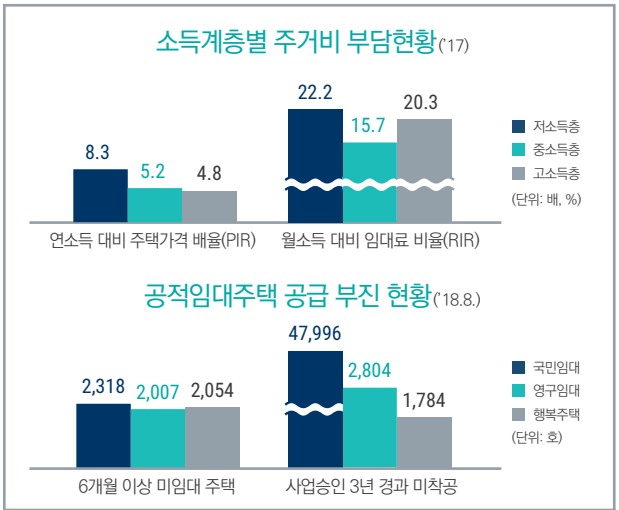
자활사업 5년 이상 장기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의 약 22%이며, 탈수급 후 자활사업 재참여자 증가 추세



자활사업 장기참여 및 재참여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 방안 마련 필요

3. 주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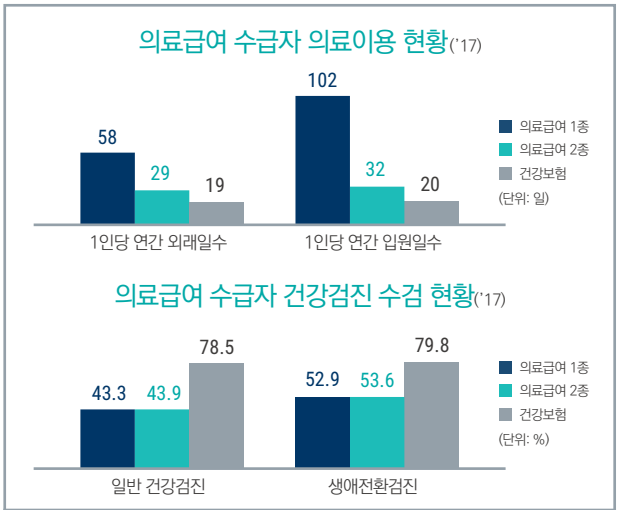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타 소득계층보다 높은 반면, 저소득층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부진한 상황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공적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4. 의료 부문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이용이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음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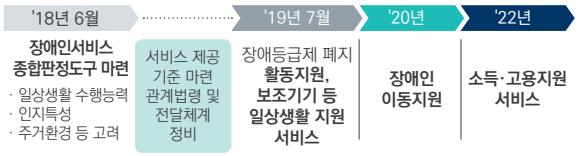
Ⅲ. 장애인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구축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면 개편 예정

기존	변경('19년 7월)
•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1~6등급) • 장애등급은 장애인 지원 각종 서비스 대상 선정의 기준	•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 (중증~경증) • 장애인 지원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계획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사회보장 사업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지원체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준비 필요

2.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고, 주로 부모의 도움에 의존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17)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장애
혼자서 스스로	9.5%	2.9%	46.9%
남의 도움 필요	90.5%	97.1%	53.1%

주된 도움 제공자('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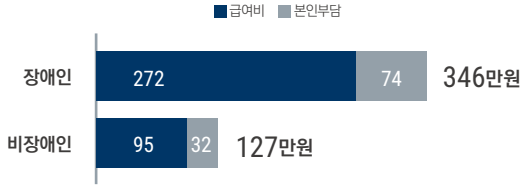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장애
부모	72.8%	98.5%	21.1%
기타	27.2%	1.5%	78.9%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대비를 위한 지원책 강화 필요

3. 의료 부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비용이 높은 질환이 많고, 미충족의료율(치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및 급여비



미충족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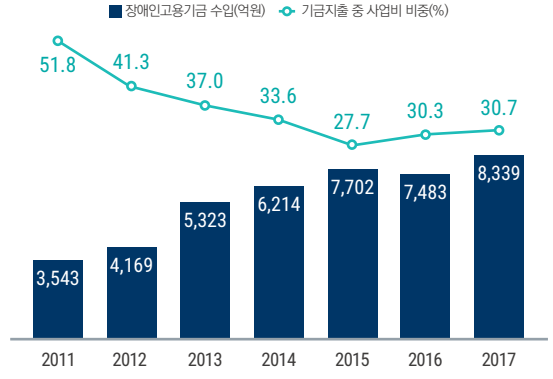
구분	장애인	일반국민
미충족의료율	17.0%	8.8%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의 연례적 미지급금 발생 해소 및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필요

4. 일자리 부문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기금의 사업비 지출 비중이 감소

장애인고용기금 수입·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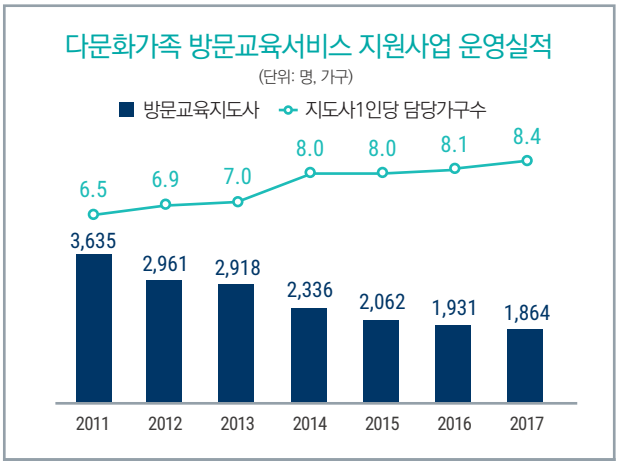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확대 등 재원배분 개선 필요

Ⅳ. 다문화·한부모가족

1. 정착지원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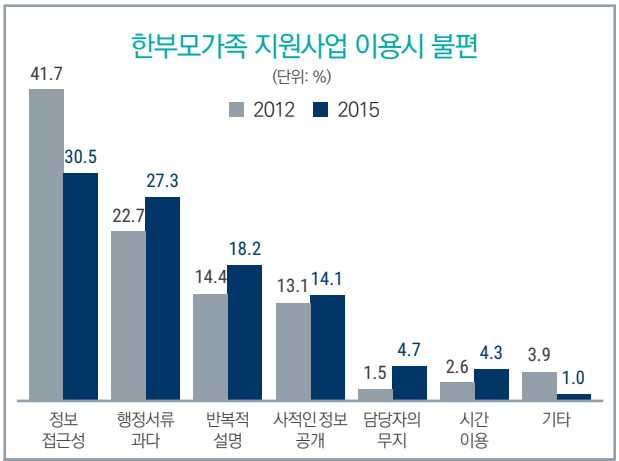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방문교육지도사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도사 1인당 담당가구수 증가 추세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담당가구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공급 개선 필요

2. 편의지원 부문

한부모가족 관련 서비스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접근성 및 행정서류과다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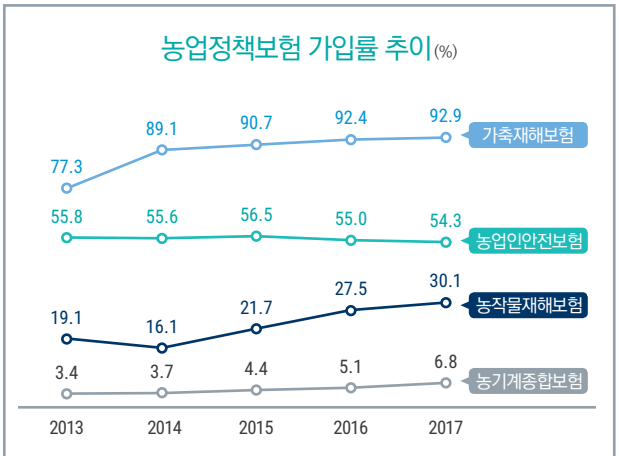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필요

Ⅴ. 농업인

1. 안전·재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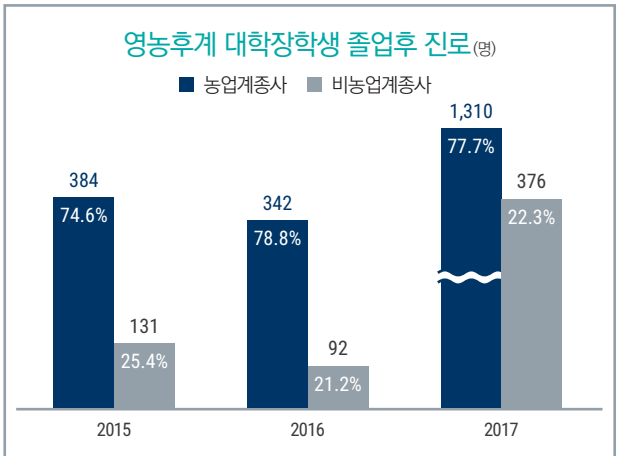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30.1%), 농업인안전보험(54.3%), 농기계종합보험(6.8%)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2017년 기준)



보장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을 통해 가입률 제고 노력 필요

2. 교육 부문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영농후계 대학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중 매년 1/4 정도가 비농업계에 종사하고 있음



영농후계 대학장학금 수혜자의 농업계 종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담당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문의 | 02-788-377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